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auri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과제	택티컬 어바니즘 기반의 가로활성화 방안 연구	손동필
수시과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김용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임유경
	건축물 성능 및 철거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유광흠
	행정중심복합도시 가로벽 디자인 지침 연구	임유경
	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성은영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연구	여혜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개선방안 연구	오성훈

기본과제

① 택티컬 어바니즘 기반의 가로활성화 방안 연구

가로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공간이며, 가로활성화는 도시재생과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의 선결 조건이자 핵심 전략이다. 가로활성화의 중요성이 강조됨과 동시에, 가로활성화를 위한 가로 구성방식에 있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났는데 ▲첫째, 차량 중심 공간에서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둘째, 배타적 공간에서 공유 공간으로 ▲셋째, 통행 공간에서 활동 공간으로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로의 유연한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최근 해외에서는 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의 적용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양적 성장과 대형개발 기초가 질적 개선과 소규모 재생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변화로 볼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 개념에 기반을 둔 상당수의 도시설계적 조치가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택티컬 어바니즘 기반의 도시계획 및 설계 기법과 그 효과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가로활성화와 가로공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적용 가능한 택티컬 어바니즘의 계획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측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로단위에서 적용가능한 택티컬 어바니즘의 개념, 특징 및 사례를 조사하고, 적용 대상, 적용 방식 및 시행 주체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후, 국내에 택티컬 어바니즘 기법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로조성 및 관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택티컬 어바니즘 기반 가로활성화 정책의 도입 및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손동필

①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조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조경진흥법」이 2015년 제정되었다. 「조경진흥법」에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경진흥시설(제7조)와 조경진흥단지(제8조) 조항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조경 산업 현황과 공간집적의 필요성을 분석했다. 설계, 시공, 소재 생산 및 유통, 유지 관리 등 조경 분야별 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조경 산업 집적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외 관련 사례를 검토 분석했다. 국내 산업지원법을 토대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시설과 단지 사례를 조사하였다. 조경 분야에서 사업체 간의 집적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국내 외 사례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조경 산업종사자 대상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제도의 필요성, 집적에 적합한 조경 산업 유형,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지정기준과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넷째,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운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불명확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예상되는 사업모델을 제시하였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경쟁력 있는 조경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지정기준과 지정절차를 제안하였다. 또한 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였고,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사후 감독과 운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제도 개선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조경진흥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영세한 조경사업자 지원과 침체된 조경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용국

②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각 지자체는 행정청사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공건축물을 조성, 관리하고 있다.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서비스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공공서비스의 균형적 공급과 질적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공공건축을 조성하고 운영·관리하는 지자체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 여러 지자체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건축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건축정책위원회, 총괄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 등 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운영하면서 공공건축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며, 충청남도는 충남공공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디자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다. 이 외에도 경기도와 수원, 영주 등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공공건축 조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건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나, 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3년이 지난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유일하게 동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자문에 대한 응답,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법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년 센터 지정 이후 법정 업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건축 조성 지원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추가 지정과 국가-지역 간 역할 분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관리 지원 업무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지자체의 공공건축 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며 국가-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협력체계 구축되면, 공공건축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공공건축의 질이 향상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임유경

3 건축물 성능 및 철거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저성장시대를 맞이하여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물 유지관리는 단순관리 측면만 고려되고 있고 성능 전반에 대한 예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축법」, 「주택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률에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성격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과 항목 및 관리수단은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준공 당시 성능의 유지를 기본으로 하며, 수명주기 동안 점검·교체·개량·성능 향상 등의 다양한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건축물 수명주기의 최종 단계인 철거의 경우, 신축공사와 마찬가지로 현장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철거과정에서의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건축물 준공 이후 관리되어야 하는 건축물의 성능, 관리범위, 수단 등을 명확화하고 철거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물의 성능 및 철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과 관계법령 간의 연계 및 체계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광흠

4 행정중심복합도시 가로벽 디자인 지침 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신개발 사업으로 규모와 성격에서 중요성과 상징성을 갖는다. 2005년에 실시한 도시개념 국제공모 결과를 발전시켜 환상형(環狀形) 교통축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도시의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환상도시’를 목표로 10년 동안 개발이 진행되었다.

대중교통순환축은 행복도시 계획의 핵심 공간이며, 계획 초기부터 디자인 정책 목표로 상정한 ‘조화로운 통합이미지 구현’의 공간적 대상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로변 일정폭의 구간을 ‘가로벽(Urban Wall)’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용도와 형태를 규제하고 있다. 행복도시 착공 이후 10년이 흐른 현재 1~4생활권 가로벽 구간의 건설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며, 6생활권은 계획 중이다.

가로벽 구간에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저층부 용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지침을 적용한 결과, 조화로운 가로경관을 창출하고 행복도시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의견도 있으나 가로경관이 획일적이고 단조롭다는 비판, 건축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개발 수요를 억제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가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접하는 공간인 만큼, 가로 디자인 규제는 사회적 합의 형성을 전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행복도시 건설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대중교통순환축의 통합이미지 실현’과 ‘보행 활성화와 활기 있는 가로경관 조성’이라는, 가로벽 구간 설정과 디자인 지침의 초기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를 진단하여 향후 가로벽 구간의 디자인 지침의 운영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 연구에서 행복도시 가로벽 지침 적용 현황을 진단하고 시민과 전문가,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권과 구역별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 지침 운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건설지역에서 디자인 지침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활력 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임유경

5 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인구절벽’, ‘지방소멸’이라는 충격적인 단어들에 유혈할 정도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일본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이미 인구성장률은 둔화되었고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30% 이상 시군구에서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역시 지역별로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극단적으로는 지방소멸될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소멸 가능성이 높은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기성시가지의 저이용으로 빈집과 유휴공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 중에 162개의 지역에서 지난 5년간 빈집이 증가하였으며, 이들 지역들 중 빈집 증가율이 100%를 상회하는 지역들도 40개 이상이며, 2015년 역시 2010년에 비해 빈집이 31% 증가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 빈집이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주거환경의 악화, 붕괴 위험, 미관 저해, 범죄 및 재해 증가, 집값하락, 행정비용의 가중 등 물리·사회·경제의 총체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이러한 빈집의 공간적 밀집과 확산은 인근 지역까지 슬럼화를 가속화하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2017년 2월,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별도의 법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활용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자원조달계획, 빈집 철거 등의 조치, 지원 대상과 내용을 포함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230여 개 시군구 중 30여 개의 지자체에서 빈집정비 관련 조례를 수립하고 있을 뿐 빈집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은 요원한 일로 여겨진다. 따라서 동법과 시행령에서 제시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조항 보다 상세한 계획 절차와 계획 기준 등을 담은 지침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집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통한 정비계획 과제를 도출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 관련 국

내외 정책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빈집정비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기존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관련 법제를 고려하여 작동될 수 있도록 상세한 절차 및 기준을 담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발·제시하고자 한다.

성은영

6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연구

새 정부는 대통령 공약인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복지 등 사회공공서비스의 확충 및 맞춤형 제공을 위해, 읍면동 행정청사를 단순 내방위주 행정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사회서비스의 거점이자 주민 자치의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행정자치부, 2017.5.). 또한 최근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읍면동 행정청사를 중심으로 행정, 복지, 보건서비스, 공동체지원 프로그램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기획단계부터 운영관리단계까지 모든 프로세스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요를 반영하고, 주민에게 24시간 개방하여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읍면동 행정청사의 서비스 기능과 공간프로그램 구성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읍면동 행정청사 시설기준은 미흡하고 기존 청사의 용도전환 및 공간프로그램 재구성을 위한 리모델링 관련 기준은 전무한 상황이다.

한편, 읍면동 행정청사를 중심으로 한 사회공공서비스 및 공동체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정부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하기보다 지역이 스스로 주민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읍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사업 및 관련 예산을 총괄 지원하는 행정자치부와 희망하는 자치단체, 참여하는 건축사 및 지역주민 등 다양한 참여주체가 지역의 여건 및 수요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읍면동 행정청사 공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획단계부터 참여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읍면동 행정청사의 서비스프로그램 및 공간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혜진

7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개선방안 연구

한국 어린이들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도시환경이 그만큼 아동친화적이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활동적인 삶뿐만 아니라 체험과 성장의 기회까지 보장하는 근린환경, 즉 '아동친화'적인 근린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도 기실 아동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는 도시공간이 부족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하지만 아동을 위한 도시공간의 개선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이다.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은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관련되어 국내외 공공 부문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광주광역시, 서울 송파구, 세종시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여러 지자체의 정책적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이해부족과 아동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간적 조건에 대한 지식체계가 불완전한 형편이다. 이로 인해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이 나타나고, 특히 공간부문에 있어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요구되는 '아동의 삶의 실질적 개선'이 가능하도록 공간적인 요구조건을 도출하고, 아동친화적인 공간적 요건에 기반하여 아동친화도시계획 수립 시 필요한 공간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정부에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계획안을 수립할 때 상세한 절차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계획 가이드라인 제시함으로써 실제로 아동이 누리는 삶의 질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오성훈

‘역사도시 유적지 주변의 공공건축, 도전과 과제’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5월 18일 경주 화백컨벤션 센터에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공동으로 ‘역사도시 유적지 주변의 공공건축, 도전과 과제-경주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선도적인 공공건축 조성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세미나는 경주시 월성 문화재구역 내 출토 유물의 발굴·조사·수장·전시를 위한 운영시설의 조성과정과 계획(안)을 소개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련 사례 리뷰를 통해 시사점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 1부에서는 첫 번째로 김상호 선임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조성 과정을 소개하였으며, 두 번째로 이관석 교수(경희대학교)가 유럽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문화유산

인근의 박물관 건축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세 번째로는 민현준 교수(홍익대학교)가 경북공과 인접한 옛 국군기무사령부 부지의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강성원 대표(건축사사무소 강희재)가 경주 월성 발굴조사 운영시설 설계안 소개를 통해 건립 예정인 건축물의 주요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1부의 4개 주제발표에 이어 2부에서는 8명의 토론자와 객석에서의 참여를 통해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최영기 원장(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땅속 유구 위주인 우리나라 문화유산 여건에 맞는 과거와 현재 공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으며 서동철 위원(서울신문)은 “발굴 자체(현장, 과정)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에 보다 방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임시 운영시설 조성보다는 항구적인 ‘월성 박물관 건립’을 위한 최적의 부지와 건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성배 과장(문화재청)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조화롭게 조성할지가 핵심인 사업으로,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때 31번의 심의를 거쳐 설계안이 완성되었듯이 월성에서도 그와 비슷한 면밀한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주 지역의 전문가와 일반인이 한자리에 모여 문화재구역 내 공공건축물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가 되었다.

박석환



**2017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는 6월 2일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2017 auri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을 열었다.

한옥포럼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 2011년부터 열어 온 행사로, 한옥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옥정책과 한옥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마련되고 있다.

2017년 한옥포럼은 '한옥 짓는 사람들'을 주제로, 좋은 한옥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한옥 짓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양질의 한옥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김대익 소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개회사로 문을 연 이번 포럼은 고영호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세 편의 주제발표와 산·학·연·관의 한옥 전문가들과 발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체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정태도 도편수(참우리건축협동조합)가 맡아 생생한 '한옥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태도 도편수는 현장에서 한옥을 지으며 경험한 현재의 한옥설계 및 시공 시스템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참석자들과 나누었다.

이어 홍성호 연구위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한옥 짓는 사람들,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홍성호 연구위원은 한옥시공의 특수성과 현 실태를 짚어본 뒤 한옥건축업 등록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치후 센터장(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이 '한옥 짓는 사람이 되려면?'을 주제로, 양질의 한옥을 짓고 보급하기 위해 전문인력 인증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전체토론에는 김왕직 교수(명지대학교)를 좌장으로 강석목 대표(고진티앤시), 김용미 대표(금성건축사사무소), 박준영 선임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 최태용 과장(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방청객과 함께 양질의 한옥을 보급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이번 한옥포럼은 양질의 한옥을 보급하고 한옥문화를 확산하려면 한옥 설계와 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장이 되었다.

구본현



2017년
제1차, 제2차
지식강연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4월 13일과 5월 17일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1차, 제2차 지식강연회를 열었다.

지식강연회는 소내 연구원들에게 다양한 지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전문가 초청 강연회이다.

제1차 지식강연회는 '인간장소, 도시건축디자인에 부치는 인간적임에 관한 논평'을 주제로 민병호 경영위원(행림종합건축)이 강연을 맡아주었다. 민병호 경영위원은 가치와 목적을 품은 사람이 공간을 만나 행위자원을 발굴하고, 이런 목적 행동이 반복되어 의미가 축적되면 그 공간이 장소로 바뀌게 된다는 인간장소의 개념 소개로 시작하여 Place 디자인, Pragmatic 디자인, Artistic 디자인 등 인간장소의 일곱 가지 디자인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건축과 공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건축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제2차 지식강연회는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후 박사(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지리학과

펠로)가 '도시재생과 사회경제적 효과'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스페인 빌바오, 런던의 테이트 모던과 밀레니엄 브리지, 바르셀로나의 산타카테리나 시장, 2012년 런던 올림픽 개최지인 스트랫퍼드 등 네 곳의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 성공요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들 사례는 도시의 성공적 재생이 단순한 건축물 정비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도시의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총체적 재생전략 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제2차 지식강연회는 우리나라 도시 재생이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백혜인

2017년 제1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도시공간재창조센터는 지난 4월 24일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동네 청소년과 함께하는 마을재생'이라는 주제로 '2017년 제1회 auri 마을재생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그간 지역사회의 주요 실행주체로서 인식되지 못하던 동네 청소년들이 재생지역 현장에서 실행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계 전략과 참여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총 3인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함께 토론을 벌였다.

첫 주제발표는 오해섭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맡았다. 그는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모형과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군산시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마을재생에서 청소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과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에 대해 설명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 총괄코디네이터 반영선 소장(선 건축사사무소)이 맡아 주었다. 반 소장은 영주시 관사골 새뜰마을사업 중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청소년 참여 사례를 들려줬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원도심 활동가 유병준 대표(예비사회적기업 앵글컴퍼니)가 '마을재생의 새로운 활력, 동네 청소년'을 주제로, 천안시 원도심 내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 경험을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동네 청소년의 마을재생 관련 사업 참여 방안,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방안,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조성 및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민경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2017년 4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최하여 열린 이번 공청회는 2016년 4월부터 수립을 진행 중인 조경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산업 종사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공청회는 김명준 과장(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김용국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 주제발표를 통해 제1차 조경진흥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조경에 대한 국민 인

식 제고 ▲조경서비스의 양적 확충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 ▲조경산업의 기반 마련과 산업 활성화 ▲조경 교육체계 구축 ▲한국 조경 분야의 국제적 위상 제고까지 6개의 정책별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실행 방안을 설명하였다.

이러 안승홍 교수(한경대학교 조경학과)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된 토론회에는 진승범 대표(이우환경디자인), 김현 교수(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 김철홍 상무(도화엔지니어링 조경레져부), 윤영관 사무국장(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회), 김명준 과장(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등 조경 분야 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조경진흥기본계획(안)의 보완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토론자들은 조경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넓게 설정할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조경진흥시설 및 단지의 개념과 지정 기준을 보완·명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조경진흥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조직 정비, 도시공원 조성·관리 주체로서 주민·민간기업의 역할 규정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5년간의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비중 있게 개진되었으며, 조경 전문 인력 육성 방안과 조경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 과제라는 점 또한 지적되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안)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얻은 보완 방향을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된 후 수립 완료·공고될 예정이다.

김용국

